

# 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했지만...野 반발에 난항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발표 직후부터 반발하고 나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및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인 가구 100만원)을 밀어붙이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거인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

### “자발적 기부” 중재안으로 당정 이견 좁혀 100% 지급 ‘합의’

###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 한심” 野 비난에 또다른 갈등 거세져

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 중재안을 재정부담 감소는 물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

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통합당의 반발을 키운 모양새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당정 발표직후부터 기부금 캠페인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느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에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렁이고 편 가르느 것에 불과하다”며 “고소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

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100%(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직후 통합당내 기류가 급변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다. 정부 또한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70% 지급안’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과 정부·야당간 논쟁 구도가 만들어지며 민주당이 난감한 처지에 처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공약 무산’ 위기를 일단 타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

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정문을 발표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는 바 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해 총 9조7000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당정 합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날다.

## 박홍근, 민주 원내대표 불출마

“자영업, 노동자 위기 버팀목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거론됐던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22일 불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도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검증된 실력과 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리위원장)’으로서 민생정치

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은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가장 젊은 3선 의원으로서 바로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기보다는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유능한 선배 의원들을 잘 모시고 당의 안정과 단합 그리고 민생국회를 선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을지리위원장으로 늘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위기 극복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 정세균 “코로나싸움, 국제협력 핵심...국수주의적 고립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려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수주의적 고립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글로벌전략연구소 국제포럼 2020(GSI-IF2020)’ 영상 축사를 통해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국제사회의 협력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제협력은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해 인류의 힘이 되어 주고 코로나19를 종결짓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공개성, 투명성, 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한국의 핵심 코로나 퇴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확진 사례를 찾아 나섰고 접촉 경로를 최대한 세세하게 추적했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갑론을

## 김기태 도의원 “경제 회복 힘 모아주길”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순천)은 20일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경우 67.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된 후보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 기회를 얻지 못한 후보에게는 위로를 드린다. 당선된 후보들은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태 의원은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과열된 선거분위기에 속해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서로의 가슴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어 “상대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고소와 고발이 이어졌다”며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민심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하는데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26건, 이첩 1건, 서면경고 5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선거 후유증을 조속히 털어내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데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당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비·경기 침체로 이어져 역을 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자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의회에서도 당선된 후보의 공약뿐만 아니라, 낙선된 후보들의 좋은 정책들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모을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